

2015년 일본의 세제개편 내용

- '15년도 일본의 세제개편은 아베 정권이 성장전략에서 강조한 법인세 개혁과 지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반영
- 대기업 우대와 개인의 소비 확대 지원은 강화되었지만, 경기 회복 후 격차가 확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

□ 감세 : 법인세 인하,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

- 일본정부는 '14.12.30 「2015년도 세제개정 대강」을 결정, 핵심내용은 법인실효세율*을 '15~'16년도에 3.29% 인하시켜 기업의 세금 부담을 2년간 약 4,200억 엔 감소
 - * 현재 표준세율 34.62%, 도쿄도 법인세율 35.64%
 - ** 외국의 법인세 : 프랑스 33.3%, 독일 29.59%, 중국 25.0%, **한국 24.2%**
- 법인세는 20%대까지 인하시키겠다는 목표이며, '16년까지 3.29% 인하시키면 31.33%가 되어 목표의 절반을 달성하게 됨
-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'15년도 약 9,900억 엔, 증세에 따른 대체 재원은 약 7,800억 엔으로 '15년 실질 감세는 약 2,100억 엔 규모임
- NISA(소액투자비과세제도)의 투자 한도를 20만 엔 증액시키고, 2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NISA를 신설
-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를 '15.1월 이후 1,200~3,000만 엔 사이에서 조정
 - '15년도에 신설되는 육아 자금의 비과세 제도는 20세 이상의 자식이나 손자 1인당 최대 1,000만 엔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
 - 학교 입학금, 수업료 등 교육 자금 증여의 비과세 제도는 '15.12월말까지였던 기한을 '19.3월말까지 연장하고, 30세 이하의 자식이나 손자 1인당 최대 1,500만 엔까지 적용 대상
- 아베 정권의 중점 과제인 지방창생(地方創生)을 세제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본사 기능을 수도권 및 간키권(오사카·고베·쿄토), 중부권(나고야) 외의 지방으로 이전시킨 경우 신규로 건설하는 회사 빌딩 등에 대한 투자액의 7%를 법인세에서 감세

- 직원의 이동이나 신규채용으로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1인당 80만 엔을 법인세에서 공제
- 다른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거나 지방의 본사를 확장한 경우 투자액의 4%와 고용 증가 1인당 50만 엔을 법인세에서 감세

□ 증세 : 적자 기업의 부담 증가, 자동차 관련 세금 증세 등

- 법인세 인하에 따른 대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형표준과세 확충, 이월결손금제도 축소, 기업배당금 과세 강화, 연구개발비 감세 축소 등 증세 조치를 실시
 - 이번 법인세 감세는 일률적으로 세율을 인하시키기 때문에 수익이 큰 기업일수록 감세 효과가 크게 나타남
 - 한편 지방세의 법인사업세는 흑자·적자에 관계없이 자금이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외형표준과세가 증세되어 적자 기업은 부담이 증가
 - *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중소기업은 예외로 과세 증세가 적용되지 않음
- 환경자동차인 에코카 감세는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, 대상 차종을 줄이거나 감세 폭을 축소할 예정
 - 경자동차 세금은 현재(7,200엔)의 1.5배인 10,800엔으로 인상
- 지방에서 빈집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터로 바꾸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도록 고정자산세의 내역을 변경
 - 구체적으로는 주택이 있는 토지의 세금 부담을 6분의 1로 경감하는 현안 우대 조치를 오래된 빈집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개정
 - 현재 주택이 있는 토지는 고정자산세 부담이 적었지만, 향후 붕괴될 위험이 있는 빈집은 우대 조치가 없어지며 공터로 바꾸면 부담이 감소됨
-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본으로 배송되는 전자서적이나 음악 등에 대해 '15.10월 부터 소비세 8%를 과세
- 부유층의 해외 이주에 따른 납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'15.7월부터 주식 등 금융 자산의 미실현이익에 소득세 등을 출국 시에 과세할 예정

- 1억 엔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에게, 출국할 때의 시가에서 금융자산의 취득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합쳐 20%를 과세
- 소비 증세는 ‘17.4월에 경기여건에 관계없이 확실히 10% 증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강에 명기

□ 시사점

- 아베 총리는 「경제재생 없이 재정재건은 없다」는 아베노믹스의 기본 이념이 반영된 세제개편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 표명
- 세제개편에는 젊은이들의 결혼이나 육아,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개인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의도
- 특히 법인세는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까지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할 필요
- 우리나라 법인세는 일본보다 10%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이 법인세를 인하시킬 경우 일본기업들의 대한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
- 이번 세제개편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과세 개혁, 주세 재검토 등의 세제개편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가 향후 과제
-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감소시키는 경감세율제도를 가을에 결정할 예정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4.12.31), 요미우리신문(2014.12.31), 산케이신문(2014.12.23)

< 세제개편 주요내용 >

실시 일정	증감	변경 내용
2015년 1월	↑	[상속세] 기초 공제를 40% 축소
	↑	[소득세] 최고세율 40%→45%로
	↓	[증여세] 주택자금의 비과세 한도 1,000만 엔→1,500만 엔으로 (‘16년 1~9월에 한도를 1,200만 엔으로, 10월에는 3,000만 엔으로 인상 예정)
4월	↑	[자동차취득세·자동차증량세] 에코카 감세의 대상차를 한정
	↑	[경자동차세] 신차는 7,200엔→10,800엔
	↓	전기자동차는 75% 감세, 연비가 좋은 가솔린차는 최대 50% 감세
	↓	[증여세] 결혼·출산·육아 비용에서 비과세 한도(1,000만 엔) 신설
	↓	[법인세] 실효세율을 2.51% 인하 (‘16년까지 3.29% 인하 예정)
	↑	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흑자의 80%→65%로 인하 (‘17년도에 50%까지 인하 예정)
	↑	외형표준과세율을 급여 전체에 대해 0.48%→0.78%로 인상 (‘12년도 대비 임금 인상률 3% 이상인 경우 증세 완화 우대)
	↑	연구개발비 감세 한도를 30%→25%로 인하
	↑	지주비율 5% 미만인 경우 배당에 대한 과세를 50%→80%로 인상
	↓	[지방이전 우대] 본사 기능을 3대 도시권 외부로 이전시키면 법인사업세 10년 면제, 부동산취득세나 고정자산세 10년 비과세, 이전투자액의 7% 감세 등 우대
2016년 1월	↓	[후루사토(고향) 납세] 주민세 및 소득세 감세 한도를 2배로 인상
	↑	[급여소득공제] 연 수입 1,200만엔 초과 회사원은 230만 엔으로 축소
	↓	[NISA] 비과세 투자 한도를 확대 100만 엔→120만 엔
4월	↓	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「주니어 NISA」 신설, 비과세 투자 한도 80만 엔
	↑	[담배세] 6개 브랜드의 경감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(‘19.3월 말까지)
10월	↓	[증여세] 주택자금의 비과세 한도 3,000만 엔으로 확대
2017년 1월	↑	[급여소득공제] 연 수입 1,000만 엔 초과 회사원은 220만 엔으로 축소
4월	↑	[소비세] 10%로 인상